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안 번호	871
----------	-----

제출연월일: 2015. 4.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안 제3조)

다. 생활임금의 결정(안 제4조)

라.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제7조)

마. 생활임금의 장려(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사회보장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5. 2. 5. ~ 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제5조의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소속 근로자
3.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4. 제3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 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성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임금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 준: 2014년 노원·성북구 생활임금액(월1,432,000원/시급 6,852원)
 - 대 상: 2014년 월 평균 총 급여가 생활임금액에 미달하는 우리구 및 도시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1차년도 도시관리공단, 2차년도 ~ 도시관리공단 및 구 소속 근로자)
 - 적용방법: 월 급여가 생활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미달 금액 보전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 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세입						
	소계(a)						
세출	생활임금액 적용 지급액	154,318	347,222	347,222	347,222	347,222	1,543,206
	소계(b)	154,318	347,222	347,222	347,222	347,222	1,543,206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 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국 비						
	시 비						
구 비	민 간	154,318	347,222	347,222	347,222	347,222	1,543,206
	기 타(지방채, 기금, 예치금 회수 등)						
합 계		154,318	347,222	347,222	347,222	347,222	1,543,206

5. 덧붙이는 의견: 해당 없음

6.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이진숙(2286-638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용

- 2014년 노원구·성북구 생활임금 월액 1,432천 원 기준 산출(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적용 대상	생활임금 미달인원(a)	월평균 생활임금 미달 금액(원)(b)	소요비용(천 원) (a×b×12월)
계	138명	209,675	347,222
구	55	292,278	192,903
도시관리공단	83	154,939	154,319

< 관 계 법 규 >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기관: 지방재정법 제18조 또는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출자하고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
2. 출연기관: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5. 5. 1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 4. 14 성동구청

나. 회부일자 : 2015. 4. 14

다. 상정일자 : 2015. 4. 22

(제21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나.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안 제3조)

다. 생활임금의 결정(안 제4조)

라.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제7조)

마. 생활임금의 장려(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사회보장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5. 2. 5. ~ 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를 제정(1986년), 시행하고 있으나 물가상승, 소득불균형 심화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 거주지 및 생활환경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의 차이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적정소득이 달라지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최저임금 이상의 적절한 임금을 정하여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소득의 불평등 개선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생활임금제의 정착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생활임금의 산출과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안제3조 제3항과 제4항의 위탁·용역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과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면밀한 법률 자문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6. 질의 및 답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재석위원 7인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